



Interview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김지혜 교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 전산과학을 전공하고 사회복지학을 부전공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박사학위(Juris Doctor)를 취득했다. 1998년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2011년 헌법재판소를 거쳐 현재는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로서 소수자·차별·인권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공저),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공저) 등을 저술하였으며, 평등한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책 집필의 계기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읽고 그동안 무심코 내뱉었던 언행과 생각들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책을 집필하겠다고 결심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2019년에 발간된 책입니다. 저는 그동안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사회적으로 소수자 차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에 대한 이슈를 제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게 차별이라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소수자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프롤로그에 나오는 '결정장애' 사건을 계기로 저 또한 차별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에는 차별이 많고 누구나 한 번쯤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별을 하는 사람 역시 많다는 것이고 그 중에 나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차별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상황에 따라 내가 차별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게 되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Q
'차별'에 대해서

책의 구절 중에 '기울어진 땅에 서서 양손으로 평행봉을 들면 평행봉도 기울어진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이 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세상이 불평등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 왜곡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로 지하철 운행시간이 지연되었을 때, 승객들의 즉각적인 반응의 하나는 불편함의 호소였습니다. 내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이 자신에게 피해

를 입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위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하는 장애인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떨어져 생각해보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순간 내 일정과 약속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불편했다면 장애인이 평소에 대중교통을 일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됩니다. 그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를 지지하며 동참할 수도 있겠죠. 정의와 공정을 지향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공정과 정의가 왜곡되어 보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생각해보면 차별적 발언이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각종 차별이 만연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인지해야 할 차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모든 차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것을 더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연하고 익숙한 차별일수록 발견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익숙한 차별 중 하나가 성차별이고 그래서 발견을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경기도가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를 선정하고 개선하기로 했다는 기사¹⁾를 보았습니다. '모모'를 '아동돌봄이/보육사'로, '여성적·남성적 어조'를 '부드러운·강인한 어조'로, '녹색어머니회'를 '등곳길 안전지킴이/등곳길안전도우미'로 바꾸자는 것 등이죠. 이렇게 성별에 따라 역할을 규정하는 걸 당연시 했던 용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차별은 단지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수준을 이유로 한 차별적 관념이 숨어 있다고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관념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의 이주민을 대할 때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외모나 능력을 이유로 사람을 달리 대하는 태도가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회에 만연하지만 익숙함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차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연합뉴스, "경기도, 일상속 성차별 용어 17개 개선 추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304600061?input=1195m> (2021.05.03).

소수자를 위한 정책과 법을 제정할 때,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다'라는 반박에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이런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평등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일어날 때 역차별 주장이 제기되곤 합니다.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변화를 초래하는데, 기존의 익숙한 질서에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경험일 것입니다. 아직 겪어보지 않은 변화된 사회를 상상하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기존의 구조에서 각자가 다른 불평등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등과 차별에 대해 느끼는 감각도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으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기존에 유리했던 입장에서 뭔가를 잃게 되는 과정이라고 느껴질 수 있고,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부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동등한 구성원이 되어 사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컨대 남성만 있던 집단에 여성이 들어오거나 비장애인 집단에 장애인이 들어온 경우에, 화장실도 새로 만들어야 하고 문화도 바뀌어야 하는 등 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구성원은 불편함을 느끼겠죠. 이런 불편함을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평등을 위한 정책은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정책도 재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등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변화를 역차별이라고 말하며 저항하기 보다는 어떻게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지 합리적으로 토론하여 정책을 개선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불편함이 평등을 위해 받아들여야 할 시민의 책임이라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일원으로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참하여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역차별을 둘러싼 논쟁은 어떤 측면에서는 '차별은 나쁜 것이다'라는 공통된 전제에 기반을 둔 것이겠죠. 우리 모두가 평등을 지향하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능력주의'와 관련하여, 학벌, 직장 등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별은 당연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합리적인 이유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인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능력이나 노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수준을 넘어서 어떤 사람의 가치 혹은 가능성을 아예 다르게 평가하는 태도와 방식을 가진다면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특정한 도구로 특정한 능력을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전반적으로 다르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벌을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다르게 매기거나 개인의 가능성을 달리 평가하고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무시하기도 하고요.

능력주의가 이론적으로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해서 정당성을 가졌었는데, 현실적으로 능력주의가 오히려 많은 사람의 기회를 제한하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능력을 축적하고 노력을 발휘할 기회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능력주의가 불평등을 세습하는 구조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능력주의가 장애인 등 많은 소수자의 인격적 가치나 가능성을 왜곡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존재로 인식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사회의 차별을 인식하였다면, 그런 사회를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불평등한 구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구조에 길들여졌을 때는 변화를 포기하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데 에너지와 시간, 노력을 투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대안을 상상하고 함께 연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설계하더라도 모두를 위해서는 어떤 설계가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죠.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건축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고 법제도를 정비할 수도 있고 여러 대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개인 이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지식과 생각을 보태서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라는 연구를 스스로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동의하고 민주사회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국제인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근본적인 권리고, 사회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원칙입니다. 차별은 집단 간의 긴장을 높이고 불평등한 사회는 갈등을 유발해 평화를 해칩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이미 존재하는 차별이 표면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차별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모두를 존중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사회적 기제가 필요한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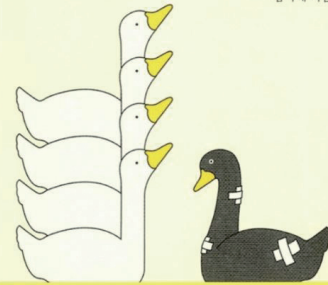
차별금지법이 특정 소수자 집단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차별의 이슈는 특정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면서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하고 차별을 받는 상황을 애써 피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하고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차별은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차별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얘기하다 보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²⁾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람들의 다양한 층위, 경험들을 반영하여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2) 한겨레신문, "국민 10명 중 9명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570.html (2020.06.23.).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지음



"웃자고 한 말에 왜 그래?"
당하는 사람은 안 웃긴 '갑'들의 말, 말, 말!

창비

Q

한국법제연구원에 바라는 점

마지막으로 유일한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바라는 점, 또는 기대하는 점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한국법제연구원에 두 가지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과거에 '차별적·권위적 법령용어 및 전문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을 연구할 때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인권과 평등의 관점에서 법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노력을 이어가주셨으면 합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법이 얼마나 세밀해져야 하는가에 신경 쓰고, 성 소수자 관련 이슈나 아직 한국사회에 도입되지 않은 법제에 대해서도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소수자를 포함해 대중들이 법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다가 법학을 나중에 배우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법을 배우면서 사회를 바꾸는 언어를 배운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는 사회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꿀 수도 있는 것임을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까지 알고, 특히 인권의 관점에서 법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어나가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들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